

“KTX 광주~목포 新線 백지화는 호남 훌대”

지역민들 분노 폭발했다

균형발전 위해 계획대로 신설 노선 건립 촉구

정부가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구간 노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개량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폭발 직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목포와 무안지역 주민들은 동남권 신공항 포지로 인해 끊어오른 영남권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 기본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경제성 논리를 호남고속철에 적용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신설 노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일상 무안군번영회장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고시될 줄은 몰랐다”며 “한마디로 허탈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유품을 토했다.

이정봉 목포상공회의소 조사과장은 “KTX 본선의 기능을 살리려면 운행 속도가 중요해 기존 노선을 개량한다는 것은 속도 우선이라는 고속철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다”면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설 노선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 등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도 저속철 현실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4일 성명을 내고 “기존 철도를 개량건설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을 고속철도라고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현재의 경제성과 사업 추진 용이성에만 치중한다면 철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대표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 가운데 광주~목포만 유일하게 고속신선이 아닌 기존선을 개량한다면 지역민의 소외감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무안공항 직접 경유 고속신설 건설은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국가적으로도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쪽으로 결정

한 것은 호남선 철도 복선화가 무려 36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완성됐던 것처럼 결국 ‘호남 푸대접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호남고속 철에서 경부고속철과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원인은 국토해양부가 3일 발표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KTX 광주~목포 구간을 고속신선으로 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보완해 고속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부안(76.1km, 평균 시속 188km) 대로 결정될 경우 총 연장은 최소 11.2km에서 많게는 27.5km, 소요시간은 6분이 늘어나게 되고 시속은 50km가량 떨어지게 된다.

전남발전진흥원 이건칠박사는 “경제성만 따진다면 호남은 할 것이 없다. 정부가 이제라도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백년대계의 시각으로 호남고속 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식 앞두고 잔디 출하

한식을 이를 앞둔 4일 장성군 삼서면의 한 잔디밭에서 아낙네들이 잔디를 출하하기 위해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묘지 봉분이나 기정집 정원 등에 사용되는 잔디는 3.3제곱미터(m²) 당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성=김진수기자 jeans@

U대회 선수촌 동의안 가결

광주시의회 통과…현대건설 내년초 착공 2015년 완공

광주시의회는 4일 오전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을 표결 끝에 제적 의원 25명 중 찬성 19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U대회 선수촌 건립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현대건설이 사실상 사업자로 결정돼 선수촌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률물량의 현금 세대 중 10% 초과분과 일반분양 뒤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광주시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날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대건설 측은 이달 내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재건축 조합은 2주 후 조합원총회를 거치게 된다. 이후 현대건설과 조합, 광주도시공사가 3자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초 착공해 2015년 4월 선수촌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이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동의안 가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운태 광주시장과 시청 간부들이 지난 주말과 휴일동안 반대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

고, 현대건설이 선수촌을 짓지 않으면 6000~7000억원 가량의 시 재정을 들여 선수촌을 건립해야 하는 등 대안이 마땅치 않는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동의안에 반대해왔던 민주당 서정성·홍인화 의원, 민주노동당 강은미·전주연 의원, 정희곤 교육의원 등 5명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동의안에 반대했다.

한편, 이날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00여 명은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동의안의 의결을 촉구하는 피켓과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우려했던 시민단체와의 충돌은 없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 표면화된 갈등

수도권 對 비수도권 대결

여야 의원 13명 ‘수도권 규제완화법’ 저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파문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여야 의원 13명이 4일 첨단업종의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빼내고 하는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의원들은 이날 오전 모임에서 의견을 모은 뒤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하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연구·개발(R&D)센터 설립규제 완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그리고 이번 규칙 개정안까지 일련의 지방 훌대 및 수도권 우선 정책들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수도권 중심 사고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산진법의 첨단업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해명 기자회견으로 수그려들 것 같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파문이 지역균형발전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빗물서도 방사성 요오드 검출

日 방사성 물질 남쪽 돌아 한국 유입 가능성

광주에서 채취된 빗물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4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광주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됐으며, 광주를 비롯한 부산과 청주 등 전국 7개 지역의 첨단업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3일과 4일 사이 채취된 빗물에서 0.442Bq/l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가장 높은 청주 지역 측정값(1.06Bq/l)은 연간 피폭 방사선량으로 따지면 0.017mSv로, X선 촬영 시 방사선량의 6분의 1이다. 절대량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기 중 농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빗물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 환산은 검출 농도의

빗물을 하루 2ℓ 씩 1년 동안 마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공기 중에서는 광주에서 3일째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는 등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모두 방사성 요오드가 확인됐다.

한편, KINS와 기상청 등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남쪽을 돌아오는 7일께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행기자 redplane@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은 조합원 100여 명은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동의안의 의결을 촉구하는 피켓과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우려했던 시민단체와의 충돌은 없었다.

한편, 이날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00여 명은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동의안의 의결을 촉구하는 피켓과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우려했던 시민단체와의 충돌은 없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4·19혁명 주역들의 한 덩어리!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창립총회

| 일 시 | 2011. 4. 7(목) 17:30

| 장 소 | 금수장관광호텔 연회장(2F) 광주시 동구 계림동 구 시청 앞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준비위원회

▪ 공동대표

4·19민주혁명회 광주·전라연합지부
지부장 김영웅

4·19민주희생자유족회 광주·전라지부
지부장 윤순덕

4·19민주공로자회 광주·전라지부
지부장 오치갑

4·19문화원
이사장 전태갑

광주4·19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이병열

4·19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최영길

4·19기념포럼
이사장 오은열

4·19기념포럼
이사장 오은열

축

축

